

커먼즈와 복지

: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론*

백영경**

저출산·고령화는 환경 위기와 함께 한국사회의 지속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돌봄의 위기를 넘어 사회재생산의 위기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가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젠더질서, 삶을 대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전환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전환의 과제는 국가나 시장, 혹은 개별 가족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것으로서 공동체적 대응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현재 사회재생산이 위기에 처한 것은 자연자원, 토지, 공적 공간과 공공 서비스 등 역사적으로 커먼즈(communs)로 간주되고 공동 사용되어 왔던 여러 자원들이 사유화되고 상품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 교육, 돌봄노동이 급속하게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상품화되어 온 신자유주의 시대는 한편으로 사회재생산의 위기를 심화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커먼즈의 복원과 생성을 향한 투쟁이 격화되어 왔다. 따라서 돌봄복지와 젠더정의를 위한 투쟁의 흐름과 삶에 필요한 자원의 공동체적 관리를 환경 및 생태적 관점에서 주장해 온 흐름을 매개하는 데 있어서 커먼즈, 특히 최근 제안되고 있는 복지 커먼즈(welfare commons)라는 개념이 중요한 접합점이 될 수 있다.

주제어: 돌봄의 위기, 커먼즈, 복지, 복지 커먼즈, 사회재생산, 현대층유론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3A20443 81).

** 주저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paix@knou.ac.kr).

1. 들어가며: 한국사회 재생산의 위기와 커먼즈 이론

기후변화,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한국사회에서 암울한 미래와 결부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전망이 없는 출산율과 고령화가 불러온 여러 현상들에 대한 공포감은 유독 크다. 대한민국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곧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인식은 2000년대 초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하여, 한국사회에서 인구문제는 현재의 지속불가능성의 상징으로서 환경문제보다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서 출산율은 1980년대 초반 이미 인구대체를 이하로 떨어져 있었으나, 인구에서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인구조절이 계속 필요하다는 인식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지속되었다. 간간히 이제는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인구 증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기는 했으나, 그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2001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떨어진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중국에는 한민족과 대한민국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대중적 불안 속에서 정부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그 결과 2005년에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정부 주도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만들어졌으며, 정권이 거듭 바뀌는 가운데서도 저출산 정책은 핵심적인 사안으로 취급되어 왔다(백영경, 2017).

이렇게 10년 넘는 기간 동안 저출산·고령화, 그 중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한국사회의 핵심적 위기로 지목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 원인과 위기를 두고는 다양한 분석이 있어 왔다(윤홍식, 2016). 저출산 위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 속에는 젊은 층의 이혼향도로 인한 농촌의 초고령화 현상이나 지자체의 인구감소 문제, 증가하는 국제결혼이주 문제 등 다양한 현상이 포괄되

어 있었다. 낮은 출산율의 원인에 대해서도 초기에 주로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나 보육 시설의 미비가 지적되면서 주로 출산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위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청년실업, 주거문제, 노동시장의 문제와 노동환경, 비규범적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원인이 지목되었고, 이에 따라 저출산 대책의 범위도 확대되어 오는 중이다. 그 결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에서부터 여성고용환경의 개선, 청년층 일자리와 주거확보, 아동수당, 난임부부 의료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대책들이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름에 포괄되어 왔지만, 저출산 대책에 투입되었다는 막대한 예산이 무색하게도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명을 겨우 넘기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지역별로 가임여성의 분포를 지도화했다가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킨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들을 출산의 도구로 취급한다는 반발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성평등한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권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고택력·비혼·만혼·출산기피를 저출산 위기의 주범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은 약화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사실이다. 2017년에 출범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무리 특단의 조치를 도입한다 한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성과가 갑자기 나올 거라고 낙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시민들 다수가 얼마간의 각종 지원책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느끼게 된 것은 그간 잇달아 나왔던 대책들이 나오는 족족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을 지켜본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며 출산과 양육 및 노인 요양 등 소위 ‘돌봄’이 필요한 분야에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오긴 했으나, 전체적인 사회정책의 기조는 돌봄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구호가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실은 고용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노동 환경이 악화되면서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동시에 수행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상의 반영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못지않게 저출산에 대한 해결이 난망하다고 보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한국의 현실을 헬조선으로 진단하는 논의 속에 반영되어 있다.

특히 출산을 할 의지가 있거나 출산을 이미 한 부모들, 그 중에서도 주로는 엄마들이 한국사회가 얼마나 아이 낳아 기르기 어려운 사회인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사회가 총체적인 ‘돌봄’의 위기에 처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송다영, 2014).¹⁾ 아이 기르기에 우호적이지 않은 노동조건 속에서 누군가 한명이 독박육아를 하는 현실은 커플의 관계에도 갈등을 가져오는 경향이 크며, 가족 내에서도 공동체 속에서 성인들끼리 친밀함을 나누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시간도 부족하다보니, 사회 해체의 경향은 더욱 가속화된다. 이렇게 관계성이 붕괴한 사회 안에서 돌봄이라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전반적인 ‘돌봄의 위기’가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석재은, 2011). 또한 돌봄의 위기가 출산과 양육을 어렵게 하고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돌봄의 결핍으로 생애주기를 따라 살아내기가 어려워진 사회에서는 돌볼 수 있는 관계 자체가 점차적으로

1) “허튼돈 그만 쓰고 양육비 달라”, 『주간동아』 1054호, 커버스토리 - 대책없는 인구절벽, 2016. 9. 7. 이들이 호소하는 내용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고, 주거를 마련하고, 아이를 돌볼 시간을 마련하고, 특히 때로는 이혼 가족을 돌볼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누군가 아이를 대신 돌봐줄 사람을 찾기도 어려우며, 보육기관도 믿고 맡기기가 어렵고, 육아기에서 학령기로 가면 경쟁 사회 속에서 엄마가 책임져야 할 내용은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양육비 요구로 수렴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영역 전반에서 돌봄의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를 둘러싼 투쟁의 발현으로 보아야 하며, 재화를 지불하는 것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성격의 것이다.

파괴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돌봄의 위기는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이기만 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가족·사회관계·공동체, 나아가 경제나 문화 전체가 재생산되기 어려워진 사회재생산 위기의 한 양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가 처한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해서 커먼즈(the commons) 논의가²⁾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자원의 공동체적 관리 방식에 대한 이론으로 이해되어 온 커먼즈론의 의미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사회적 보호와 복지의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자 한다. 커먼즈는 토지, 물, 숲, 공간 등과 같이 ‘잠재적인 사용자를 배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고, 한 주체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자연적 자원이나 인공시설’이라 정의된다는 점에서 물질적인 자원으로서의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다(최현 외, 2016a). 하지만 커먼즈를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들은 공유의 가치를

2) 커먼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이후 본문에서 다루야 할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우선 번역어의 문제만 짚고 넘어갈 것이다. 본디 영국에서 공유지를 의미하는 개념인 ‘commons’는 공유지, 공유체, 공유자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된다. 최현(2013)은 commons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오스트롬(E. Ostrom)이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common pool resources는 소유권과는 별개로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이라는 의미에서 공유자원 common property resource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번역어로서는 ‘공동자원’을 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그는 오스트롬에게서는 commons와 common pool resource가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commons와 common pool resource를 구분하지 않고 공동자원으로 번역하는 것은 common pool resource라는 학술적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역사적인 현상으로서의 커먼즈를 망각하기 쉽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commons는 자원의 문제로 환원되기 어려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돌봄과 복지의 문제를 다루는 본 논문 주제의 특성 상, 공동자원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대목도 많다. 그러나 공동자원을 대신할 번역어를 찾기 어렵고 ‘공동자원론’이라는 이름으로 축적되어 온 한국의 연구 성과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국의 연구 성과를 지칭할 때는 공동자원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되, 일반적인 의미에서 commons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발음 그대로인 커먼즈로 표기할 것이다. 이는 미명환 번역어를 찾기 어려워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본 학계에서는 commons를 그대로 발음하여 ‘커먼즈(コモンズ)’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강조하며,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사회조직의 원리에서도 대안적인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을 꾀하는 사람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Bollier, 2014). 특히 신자유주의로 인해 복지가 삭감되는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서뿐 아니라 동시에 시장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 일상적 삶에 개입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들, 그리고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 대안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회운동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커먼즈론은 세계적으로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Sohn·Kousoulas·Bruyns,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먼즈론이 과연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돌봄의 위기나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해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커먼즈가 현 사회재생산의 위기를 이해하고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은 여러 차원에 걸쳐 있다. 우선 사회재생산의 위기가 발생한 원인 자체가 자연자원, 토지, 공적 공간 등 역사적으로 커먼즈 혹은 공동자원으로 이해되고 누려왔던 자원들이 급속히 사유화되고 상품화되어 온 데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대중들이 생필품이나 주거 공간, 식량 등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커먼즈의 파괴는 매우 큰 타격이 되어 왔다(하비, 2014).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자원의 상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자원을 공동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공동체 내의 사회적 관계망이 소실된 것 역시 사회재생산에서 매우 큰 타격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자연적 자원이나 인공시설을 관리하는 방식이 상품화되고 사유화된 것 못지않게 그 과정에서 이루어져 온 인간의 삶을 서로 살피고 돌보는 기능이 사라진 것이 돌봄의 위기를 가져왔고, 이는 사회재생산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의료, 교육, 돌봄노동 등 그전까지 전면적인 상품화에서 비껴나 있던 영역들이

급속하게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상품화되면서, 사회재생산의 위기 역시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복지 영역의 요구는 결국 공동체가 상실한 자연적 자원이나 인공시설에 대한 권리 투쟁, 즉 커먼즈의 복원과 생성을 향한 투쟁으로 이어지곤 한다는 점에서 커먼즈와 현 사회재생산 위기는 여러 차원에서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커먼즈론이 가진 자연자원의 관리, 생태 및 환경 차원과 더불어 돌봄의 복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차원이 커먼즈의 본질뿐 아니라 최근 일어나고 있는 커먼즈 운동을 이해하는 데서도 핵심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동시에 커먼즈가 가진 이러한 복합적인 차원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최근 제안되고 있는 복지 커먼즈(welfare commons)라는 개념을 검토하면서 그 유용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피오나 윌리엄즈(Fiona Williams)를 비롯해 특히 유럽의 사회정책 연구자들과 활동가들 가운데 사회복지의 문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현재의 투쟁에서 돌봄은 핵심적인 쟁점이며, 이 돌봄문제를 해결하다보면 결국 생태환경 및 자연자원의 관리 문제와도 만나게 되는데, 흐름을 달리 하나 상통하기도 하는 이 두 영역을 매개해 줄 수 있는 것이 복지 커먼즈 개념이라고 주장한다(Williams, 2015). 그런데 이 복지 커먼즈라는 개념은 과연 커먼즈 논의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복지 커먼즈 개념은 커먼즈의 사회 관계적 차원을 중시하는 연구 흐름에 입각해 있으며, 그것의 기여는 이제까지 주로 국가 및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어 온 커먼즈 논의에 가족과 젠더의 차원을 더할 수 있는 장을 연 것이라고 보고자 한다.

2. 커먼즈와 복지: 개념적 검토

1) 국가, 시장, 그리고 커먼즈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커먼즈 연구는 제도분석 모델을 이용한 공동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로서의 측면이 강조되어 온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전개되어 왔다. 즉 사유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사유화되었던 것들을 되찾는 투쟁, 특히 신자유주의에 맞서 공동자원을 확대해나가는 운동에 담론적·비판적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오스트롬의 영향 속에 있지만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최현·파이성성, 2015).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오스트롬에 대해, 자율적·자치적 자원관리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핵심 개념에서 소유제도의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자본주의와 근대적인 사적소유제도가 공동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주목하지 않았으며, 커먼즈의 구체성보다는 이론의 일반화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비판한다(정영신, 2016).

실제로 오스트롬은 커먼즈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여기에서부터 공동자원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마주치게 되는 사회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일반 이론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Ostrom, 1990). 오스트롬은 경험적 사례 연구에 입각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커먼즈의 이용·관리 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의 제도설계 원리가 작동한다고 정리했다: ① (사용자와 자원의)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② 사용규칙과 제공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③ 집합적 선택장치, ④ 감시 활동, ⑤ 점증적 제재 조치, ⑥ 갈등 해결 장치, ⑦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⑧ 중층적 사업단위(nested enterprise) 등이다(Ostrom, 1990). 신제도주의를 표방하는 오스트롬의 모델은 종종 정

태적인 상황에서 공동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규칙을 밝히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이해되곤 하지만, 새로운 규범과 원칙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물리적 기술을 개발하는 동적인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서 제도발전분석틀 [IAD: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IAD) Framework]을 발전시켰다. 그의 관심은 공동체가 자치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있었고, 초기 그의 실천적 관심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국가나 공공기관보다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오스트롬은 시장이나 자본주의 자체를 문제화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공동체나 자치단위를 모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커먼즈가 가진 속성을 감안하면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한데, 역사적으로 커먼즈를 파괴해 온 것이 국가와 시장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커먼즈가 공동체에 의한 지속적이고 도덕에 기반한 이용을 강조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통합적인 관계에 입각해 있었다면, 근대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커먼즈를 지속적으로 파괴해 왔고 국가는 자연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파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왔다. 근대 사유재산제도는 전통적 커먼즈가 생계와 생존의 필요에 따라 영위해 온 관습과 실천들을 부정하였고, 이를 통해 자연을 단지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하여 이용을 목적으로 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연 것이다.³⁾ 결국 커먼즈를 지키거나 다시 회복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

3) 물론 자본주의 경제의 팽창과 함께 근대국가 체제가 수립되고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자연 자원을 이용할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인공적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역시 사유화나 민영화가 금지되거나 적어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러한 자원과 재화에 대한 접근권이 인간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전통적인 커먼즈 자체는 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커먼즈에서 유래하는 도덕적 관념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캐테리치, 2013; Ostrom, 1990; Bollier, 2014).

‘공동의 것’이라는 주제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커먼즈의 파괴를 정당화해 온 것이 국가이기는 하나 커먼즈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내는 것 역시 국가일 수밖에 없으며, 현대 국가의 존재는 단지 사유재산제도를 보호하고 이윤추구 행위를 보장하는 데만 있지는 않다. 특히 복지국가 시대 이후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와 공공서비스의 많은 부분은 커먼즈로 간주되고 있으며(Menstrum, 2015),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공(公), 커먼즈는 공(共)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이해를 복잡하게 하면서 공공성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낳고 있기도 하다. 시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사(私)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순수하게 개념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실의 시장의 역할은 훨씬 복잡할 수밖에 없다(Bollier & Helfrich, 2012).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는 공공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시장으로 이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부상하고 있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나 사회적 기업의 성격에 대해서도 과연 공(公), 공(共)과 사(私)의 관계 속에서 어디에 위치시킬지를 두고 논자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⁴⁾ 결국 커먼즈가 국가와 시장 그 어느 한 쪽에 속하지 않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커먼즈에 대한 논의가 전통적인 커먼즈의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단순히 공(共)으로 간주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미 존재하는 커먼즈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커먼즈를 만들어간다고 할 때,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해진다고 하겠다.

4) 공적(公的)인 것과 사적(私的)인 것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논의는 2.3에서 다룰 것임.

2) 공동체의 현대적 필요성: 현대총유론의 문제제기

자원의 공동체적 이용을 통해 공동체의 복원을 시도하는 운동으로서 한국 상황에 비추어 흥미로운 것이 일본의 현대총유론(現代總有論)이다. 일본의 법학자인 이가라시 다카요시(五十嵐敬喜)가 중심이 되어 제창해 온 현대총유론은 주로 도시재생이나 재해지 복구,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와 삼림 등을 공동이용해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이가라시, 2017). 현대총유론은 소유의 문제에서부터 마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차원에서 총유를 추구하며, 나름의 일관된 사상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현대 커먼즈론에서 중요한 이론적 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시재생이나 재해지 복구,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와 삼림 등을 공동이용해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실제로 찾아가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⁵⁾ 이들의 주된 문제의식은 국가와 시장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라기보다는 근대사회의 인간들이 가진 개체 중심성, 즉 개(個)를 어떻게 극복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즉 공(共)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커먼즈를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공동체로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현대총유론이 특히 흥미로운 것은 그 문제의식에 한국과 유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이 배경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비슷한 인구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현대총유론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문제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인정하되 그 자체의 해결에 매달리기 보다는 이를 하나의 징후로 보면서 공동체 복원과 사회체제 전환의 계기로

5) 제3세션, “현대 총유론 특별세션”, 『동아시아의 커먼즈: 가능성에서 현실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제주대학교 SSK 연구단 주최, 2017년 2월 15-16일, 제주대학교)에 실린 하기와라 아츠시, 노구치 가즈오 등의 글을 참조

삼는다. 이러한 현대총유론은 한국의 연구자들에게도 총유, 즉 공동체가 함께 소유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는, 한국의 민법 상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소유 방식의 확산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커먼즈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이미 사유화된 토지나 자원들을 공동체 관리 방식으로 돌리는데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⁶⁾ 현대총유론의 논자들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의 지역 붕괴 현상이나 동일본대지진의 피해 복구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토지나 공간을 비롯한 자원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함께 혜택을 나누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높은 토지 가격과 함께 토지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이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할 때, 소유권과 분리되는 이용권의 개념을 확산시키고 공동의 이용과 혜택을 가능하게 하는 총유 주체를 만들어내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변혁을 이뤄냄으로써 장기적으로 사적 소유의 개념을 약화시켜겠다는 것이 현대총유론의 기획이다(이가라시, 2017).

그런데 토지와 공간의 공동체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개혁 방안으로서의 현대총유론도 흥미롭지만, 커먼즈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적 삶이 필요한 이유로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고령자의 증가를 단지 위기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환을 위한 계기로 보고 있는데, 이는 고령자가 처한 삶의 조건이 단지 고령자뿐 아니라 인간 존재라면 누구나 가진 상호의존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도시에서의 삶을 선택하는 젊은 층에 비해 고령자들은 지역에 남아 살려는 경향이 많으며, 높은 건물이나 빠른 자기부상열차와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욕구가 있기보다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자하기 때문

6) 이가라시 다카요시 외 지음, 『현대총유론』, 제주대학교 SSK 연구단 공동자원연구총서 003, 진인진, 2016. 같은 책의 최현, “역사후기” 참조

에 이들이 총유사회를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이가라시 다카요시는 전망한다. 노령층이 젊은 층보다 더 큰 비율로 성장을 지향하고 투기세력을 지원하는 한국에서는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전망이지만, 고령자의 경우 결국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으며 수평적 연대와 돌봄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증가가 사회에 경쟁과 축적이 아닌 협동과 부조의 정신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효율성이나 편리성에서 행복을 찾는 인간을 기본으로 해서 도시를 설계하고 인간이란 존재가 마치 개별화된 상태에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듯 믿는 태도를 버리고, 나이에 상관 없이 누구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누구든 혼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정신과 마음의 총유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국가와 개인이라는 이항대립 안에 가족이나 지역 등의 중간항을 삽입할 수 있게 되며, 고독사하는 사회, 연대가 사라진 사회로 표상되는 근대의 쇠락을 방지하고 미래로 향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총유론이 그리는 새로운 사회상이다.

현대총유론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가와 개인이라는 이항 대립 사이에 공동체를 위치짓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는 개념적으로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으나, 세계 곳곳에서 문제적 현상이라고 논의되는 현대적인 시안을 공동체 회복의 계기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인간 누구나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돌봄을 매개로 하여 커먼즈를 재구성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물론 현대총유론 그 자체가 복지와 커먼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하더라도, 저출산·고령화로 나타나는 사회재생산의 위기와 관련하여 돌봄의 문제, 복지와 커먼즈에 대한 논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하겠다.

3) 사적(私的)인 것과 커먼즈

현대적 커먼즈를 추구하는 운동들은 다양한 층위에서 국가와 시장,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흔히 국가가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복지 서비스와 커먼즈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돌봄과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과연 젠더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를 비껴가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석재은, 2011; 윤홍식 2011). 실제로 현대총유론의 문제는 돌봄의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음에도 복지 서비스와 커먼즈와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돌봄을 상상함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돌봄의 주체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국가와 개인 사이의 이항대립 속에 지역과 가족을 중간항으로 삽입함으로써 공동체적 관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현대총유론의 발상은 돌봄의 문제에서 가족의 이름으로 주로 여성들이 수행해왔던 인정받지 못한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며, 공동체라는 말에 대해 종종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보이는 거리감을 줄여주기보다는 확인시켜주는 지점이 있다. 또한 현대총유론은 자본주의 자체의 변화에 따라 복지의 패러다임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에도, 소유관계에 주목하는 것에 비해 시장이 수행해 온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나 돌봄의 복지가 현대적 의미에서 공공성의 이름에 값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둘러싼 국가와 가족의 관계, 국가와 커먼즈의 관계와 함께 사적(私的)인 것과 커먼즈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선 복지와 커먼즈에 관련해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공공재(public goods)로 보는 반면, 의료보험이나 복지서비스의 경우에는 경합성이 있다고 보아 시민들

의 공동자원(CPRs)으로 보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커먼즈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국가와 복지, 시장, 공공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용어 이상으로 따져봐야 할 점이 많으며, 시기에 따라 그 관계의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역시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전적인 의미에서 복지국가라고 하면 개인이 살면서 겪게 되는 위협에 대해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호를 제공하는 존재라 간주된다. 국가의 역할이란 그런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며,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곧 공적(公的)이라 이해되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는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복지 공급 자체가 시장 논리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의료나 주거, 교육, 물, 대중교육, 에너지 등에 대한 접근권은 모두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누려야 할 권리로서 간주되어 왔지만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면 서부터는 모두 점차 시장 영역으로 편입되었고 가격의 급등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국가는 단순히 공적(公的)인 영역이라고 할 수 없고,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사회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었다 할 수 있지만, 이는 단지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한된 현상만은 아니고 실제로 국가와 공적(公的)인 것의 관계는 언제나 긴장 관계 속에 있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커먼즈를 이용하는 커머너(commoner)들에게 있어서 공유지 혹은 공동자원으로서 커먼즈의 역할은 토지를 비롯한 자원을 소유하지 않아도 그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존재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이었던 셈이다. 인클로저 이전의 커먼즈는 커머너들에게 자신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것이 없어도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커머너들이 모이고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라인보우, 2012). 이렇게 볼 때 결국 커머너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자 그들이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커먼즈 자체가 공적(公的)인 공간이며, 공익이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제도화된 국가의 이해관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적인 것을 국가와 동일시 할 수는 없으며, 공적(公的)인 것의 본질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커머너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라는 자각 속에서, 국가와 공적인 공간을 장악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 자체에 있다고 해야 한다. 바로 이 커머너들이 커먼즈를 통해 자원을 얻고 주체가 되는 과정, 그리고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원 즉 커먼즈를 확보하고, 공동체를 능동적으로 구성 및 재구성하는 전 과정을 일컬어 커머닝(commoning)이라고 한다.⁷⁾

한편 국가가 공적(公的)인 것으로 이해되는 동안 사적(私的)인 것은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사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한편에서는 시장과 이윤을 사적인 것으로 보았던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이나 가족과 같이 시장의 이해관계에 결코 물들어서는 안되는 존재를 사적인 것으로 간주하곤 한다. 마찬가지로 공/사 구분에서도 국가와 시장을 대비시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국가와 시장 등 제도화된 영역을 모두 공적 영역으로 놓고 가족이나 개인, 자원 봉사 등 사적인 것으로 대비시키는 입장으로 나뉜다. 그러므로 커먼즈의 입장에서 보면 공적인 것을 국가와 바로 등치시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는 것만큼이나, 커먼즈를 가족이나 개인으로 귀속되는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입장과도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커먼즈는 공동체의 자체적인 노력만큼이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확보하고 누릴 권리가 있으며, 공동체의 좁은 틀

7) 커머닝 개념을 지역 연구 분석에 활용한 사례로는 김자경(2017)을 참조.

에 갇히지 않고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이를 둘러싼 정치에 참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돌봄을 둘러싼 여성과 가족들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공적(公的)인 이슈이자 공적(共的)인 이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Bollier and Helfrich, 2012). 특히 사회재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이나 국가를 넘어서 커먼즈를 만들어 내고 확장하며, 공적인 영역의 일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커먼닝 과정이 중요해진다. 사회재생산의 문제는 종종 특정한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결정 사안을 다루게 되며, 때로는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문제와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경계밖으로의 확장은 최근 지역공동체를 만든다고 할 때 흔히 이야기되는 민-관 협력 모델과는 다른 것으로서, 커먼닝이란 국가와 시장 혹은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는 시민사회나 공동체가 각기 공과 사의 영역을 유지한 채 만나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나 공과 사 구분을 넘어서 커먼너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커먼즈 자체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커먼즈란 그런 의미에서 “자각한 시민들이 스스로의 삶과 위협에 놓인 자신들의 자원들을 스스로의 손으로 책임지겠다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유와 협동, 호혜성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적 실천과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Bollier and Helfrich, 2012). 커먼즈는 공동체 조직과 동네 모임, 선주민들의 관습과 실천이나 종교 공동체의 실행 속에서도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거창하고 획기적인 무엇이기 보다는 국가와 시장의 영역이 아닌 일상 속에서 생계를 유지할 가능하게 해온 작은 실천들에서 커먼닝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품앗이를 조직하고, 시장의 압력 속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마을 속에서 돌봄의 공동체를 꾸려가는 모든 노력이 커먼즈를 확대하는 커먼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돌봄과 사회재생

산의 문제를 사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체의 중요한 사안으로 취급하지 않는 커머닝은 결코 제대로 된 커머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까지 커먼즈론은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관계성과 돌봄의 문제에 대해 중요한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에서 가족의 역할이나 사회관계에서 젠더의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아왔다. 그러나 생태나 환경,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 정의를 비롯하여 커먼즈 운동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가와 시장에 맡겨 해결할 수 없는만큼이나 복지의 문제 역시 개별 가족에게 맡겨두거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재생산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 자체가 개별 가족의 힘으로는 현대 사회의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증폭시키고 있는 돌봄의 위기는 사적(私的)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3. 복지 커먼즈: 국가와 가족을 넘어서

1) 신자유주의 시대의 돌봄 위기와 커먼즈

복지와 커먼즈의 관계를 논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인간의 삶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한 사회적 보장과 보호, 즉 우리가 복지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내용들은 언제나 공동체 존속의 중요한 이유였으며 커먼즈의 역할은 단순히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자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하고 관리하는가는 결국 어떠한 삶을 지향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커먼즈는 오랫동안 나름의 방식으로 교육, 의료, 돌봄 등을 제공해온 주체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커먼즈 논의를 복지 영역으

로 확대한다는 것은 본디 커먼즈의 중요한 기능이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커먼즈에 대한 관심이 주로 자원관리 방식에 치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하는 삶의 영역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지 커먼즈 논의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물론 현재 복지 영역을 둘러싸고 위기가 고조되고 사회적 저항이 이어지는 것은 시대적 특수성이 있다.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는 현 사회의 위기에 대해 논하면서 우선 2008년 이후 자본주의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는 다차원적인 것이며, 단지 금융 차원의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위기는 생태적 차원과 사회재생산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발현 양상은 다를지라도 특히 ‘돌봄위기’가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돌봄위기의 원인을 이제껏 사회재생산을 체계적으로 위협해 온 금융화 자본주의(financialized capitalism)라고 보는데, 사회재생산에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모든 자본주의 형태에 공통된 특징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금융화 자본주의에서는 사회보호가 약화되고 시장화가 강화되는 양상을 강하게 띠면서 사회재생산의 위기가 격화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 대개는 무급으로 재생산노동을 수행하던 여성들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약화됨에 따라 점차 유급노동으로 편입되는 비율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이제까지 이 여성들이 수행해 오던 돌봄노동을 누가 할 것인가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프레이저, 2017).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자기보다 가난한 누군가에게 가족과 공동체의 일을 떠맡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돌봄 떠넘기기의 연쇄를 라셀 파레나스(Rhacel Salazar Parreñas)는 ‘글로벌 돌봄사슬’ (global chain of care)이라고 부른다. 가사노동에서 뿐만 아니라 의료와 간병, 양육 등 돌봄노동 전반에서 부유층은 빈곤층에게, 빈곤층은 다시 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돌봄노동을 전담해서

맡아주던 자국내의 여성이나 하층민이 사라지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오던 남성노동자들 역시 시간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이제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을 함께 수행하게 된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더 극심한 시간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누구나가 시간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은 결국 결국 가족과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면서 위기는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저출산의 원인이나 고령화 현상의 결과를 논의할 때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이긴 하나, 결코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간호나 간병 인력이 부족한 상황 역시 돌봄노동자들의 지역적·지구적 이동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파레냐스, 2009; Hochschild, 2000).

그런데 이러한 돌봄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기조와 함께 새로운 가부장제의 강화라고 베아트릭스 캠벨(Beatrix Campbell)은 강조한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연자원과 돌봄, 교육, 의료 등 이전까지는 상품화 정도에 제한이 있었던 영역들이 광범위하게 상품화되면서 착취가 강화되어, 대중들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해서 반드시 복지 분야 자체가 삭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 분야 역시 효율성을 가치로 평가를 받게 되며 특정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가가 복지의 핵심인 것처럼 이해되게 된다. 어떤 의미로는 복지에 대한 이해 방식 자체가 변화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으로도 평등의 원리는 훼손되고 위계가 오히려 강조되면서 젠더와 성, 인종, 장애에 구애받지 않는 권리를 위한 투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Campbell, 2013).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돌봄 및 복지를 둘러싼 투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일어났던 투쟁의 흐름을 개념적 차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송제숙, 2016).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복지국가를 둘러싼 비판은 주로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지만, 동시에 복지국가가 기초하고 있는 가족

모델, 즉 남성단독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저항이 있어왔다. 다시 말해 복지 국가가 상정하고 있는 규범적인 인간의 상에 부합되지 않거나 배제되었다고 느끼는 집단에서 인종, 젠더와 성, 계급, 장애, 연령 등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즉 기존의 복지국가는 개인과 가족에 대해 특정한 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 혜택을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의 규범과 행동을 요구하고 빈곤과 노동능력, 장애와 같은 개념을 정의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비판자들은 복지국가가 요구하는 특정한 주체상에 주목하였으며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 결과 실제로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편 1980년대 이후 90년대까지의 투쟁은 여성운동에서 유래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라는 구호의 영향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개인의 경험이 운동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 주로 문제가 된 것은 복지 체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도덕 담론과 낙인화 효과였다. 당시의 투쟁은 주로 복지가 개인의 자아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목했고, 분배와 인정을 향한 투쟁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다(Fraser, 1995; Honneth, 1995). 이들은 제대로 된 복지라면 물질적 조건의 개선과 동시에 인간적 존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그 결과는 물질적 투쟁과 문화적 투쟁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여성과 장애인뿐 아니라 다양한 조건의 모든 개인들을 포함해서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권리와 동등한 도덕적 가치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는 기존의 정치적 행동과는 다른 방식의 집합적 저항이었고, 개인들이 스스로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조건에 개입하게 된 것을 의미하였다. 그 결과 부모노릇하기와 파트너쉽의 문제, 가족과 돌봄과 같은 영역이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게 된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의 문제의식은 결국 시대에 맞는 정치적 입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주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2008년 이후 금융 위기로 불거지긴 했으나, 실제로는 생태와 사회재생산 전반에 걸친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새로운 미래 사회를 상상하고 그 기초를 닦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는 전쟁의 위험과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세계 정치경제, 동일본대지진에 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그리고 이주와 난민 등 지구화된 세계에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인구 문제 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변화된 세계에서 사회운동 역시 여러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의 점거 운동이나 반빈곤 운동, 환경운동, 선주민 운동, 이주자 운동, 인종주의 반대운동, 여성운동, 복지사회를 향한 운동, 환경정의 운동, 군사주의 반대운동, 반성장 운동, 성적 시민권 운동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정의로운 사회를 요구하는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공동자원과 복지 커먼즈

21세기에 들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운동에서 중요한 특징은 커먼즈 혹은 공동자원이라고 할 만한 것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토지, 물, 공간, 시간, 창의성, 공공 서비스, 돌봄 등 삶을 꾸러가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사유화되고 상품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자원들을 요구하는 투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커먼즈를 요구하는 투쟁이 중요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개념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하비, 2014). 예를 들어 돌봄노동의 부담을 과중하게 저야 하는 여성들의 투쟁과 도시민들이

공유하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투쟁, 자연자원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약화시키려는 투쟁, 금융자본의 약탈을 제어하려는 투쟁, 더 나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투쟁, 원자력 발전의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 다양한 가족형태와 성정체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은 모두 삶을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의 사회에서 박탈당한 어떤 자원의 공유를 요구하는 커먼즈 운동 속에서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Williams, 2015). 예를 들어 대만의 원주민 토지반환 요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토지에 대한 요구가 실제로는 훨씬 다층적인 요구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원주민 공동체와 국가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개발 문제이거나 자연자원 관리방식의 차이라는 점에서 원주민들의 토지반환요구는 정체성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이거나 아니면 환경이나 생태운동의 쟁점으로 이해되곤 한다(정영신·백영경, 2015).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토지를 반환받는다는 것은 원주민 인구의 열악한 건강, 낮은 교육 수준과 높은 실업율, 빈곤 문제를 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의미도 크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토지의 공동체적 관리의 문제와 삶의 복지 문제는 뚜렷이 구분되는 사안이 아니다. 캐나다 선주민 운동의 경우에도 토지를 찾거나 국가로부터 배상개념의 재원을 분배 받는다는 것은 20세기 초반부터 진행되어 온 백인동화정책의 피해자로서 여전히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구성원들을 백인들의 생의학(biomedicine)이 아니라 선주민의 방식으로 치유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이며, 그러면서도 백인들의 의학이 주는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의료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문화가 배제되지 않는 방식의 교육을 받는 문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선주민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숲이나 바다, 그리고 거기서 수확되는 생산물은 선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의례를 치르고, 어린 세대를 교육하며 나이든 세대를 죽을 때까지 돌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런 면에서 언뜻 분리되어 보이는 생태적인 요구와 사회복지적인 요구는 현실에 있어서는 맞물려 있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 커먼즈는 완전히 분리된 두 영역을 이어주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연결되어 있거나 종종 분리되어 사고되고 각기 다른 계보 속에서 진행되어 온 사회운동들을 보다 분명히 함께 이어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해 복지 커먼즈라는 개념들은 여러 투쟁 가운데서도 특히 커먼즈 논의와 돌봄복지를 연결해 주는 데 특히 유용하다고 보이지만, 당연히 유일하고 특권적 지위를 가지는 개념들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복지 커먼즈라는 틀을 통해 서로 다른 저항과 비판의 지점들을 연결해서 사고할 필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돌봄과 복지의 위기를 단지 재원의 부족이나 금융위기로 인한 여파 등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입장을 넘어서 통합적인 시각에서 사회재생산의 위기라는 현상을 바라보게 해준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개념적인 연대에 기초할 때 커먼즈는 그 자체로 비자본주의적인 것을 상상하는 투쟁의 거점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삶을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할 때 복지 커먼즈라는 개념은 지난 세기 동안 토지, 물, 공간, 시간, 공공서비스와 돌봄, 교육과 의료 및 건강의 상품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존을 위협받아온 공동체 구성원들과 자원을 가지지 못해 시민으로서의 삶을 박탈당해 온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저항을 담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개인화와 상품화에 대한 저항이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들을 제공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단순하게 확인하거나, 돌봄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친족이 감당하는 오래된 방식으로서의 회귀여서는 곤란하다. 복지의 커먼즈에서 핵심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적인 자원을 공동체 앞으로 확보하는 노력이며, 이러한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원들의 복지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정치적인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공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공동체가 자원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여 돌봄의 필요를 감지하고 제공하려
 는 노력을 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서비스
 의 형태로 주어질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시장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복지 수요를 양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
 로서 파악하고자 하며, 실제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무엇
 이고 돌봄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지를 찾아내려 하기 보다는 서류에 의존하
 는 관료적인 태도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비용과 수요를 감축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는 양상을 보인다. 현재 한국사회도 복지 수혜의 자격을
 규정하고, 그 요건에 맞는지를 입증하고 감시하며 관리하는 체제가 만들어낸
 여러 비극적 사례를 목격한 바 있으며, 반대로 규정을 악용하여 공적 자원을
 사취하는 사례들 역시 다수 존재한다. 보육이나 요양 서비스의 경우에는 공
 적 지원이 증가하면서 지원금이 유인이 되어 오히려 시장 영역이 확대된다던
 가, 복지를 관장하는 행정영역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실제 복지를 필요로 하
 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능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국
 가 주도의 관료적 복지 체제 속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탈인격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시장 주도의 체제 속에서는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이 이윤 창출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돌봄이라는 것은 그 성격 자체가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시공간에
 대한 관심과 때어서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표준화된 국가 시스템이나
 시장 기제에 맡겨 생산하고 분배하면 되는 물건이 아니다. 돌봄이란 본질적
 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혹은 개인과 자연을 포함한 주변
 환경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관계성을 떼어놓고는 상상하기 어렵

다. 커먼즈는 관습법에 가깝게 정해진 운영원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각 기관이 운영되어야 할 방안을 촘촘히 규정하고 있는 정식 법률 체계와는 달리 커먼즈마다 주어진 자연환경과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리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며, 시장의 교환 논리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중앙집중화되지 않은 방식의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운영된다는 강점을 가진 체제이다(Bollier and Weston, 2013). 따라서 현재 시장과 관료제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돌봄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자원뿐 아니라 공적 지원을 활용하되 공동체 스스로 구성원들의 필요에 맞게 조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커먼즈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Allan 2016). 복지 시스템이 지금의 체제로 지속된다면 그 문제점은 단순한 돌봄의 위기나 비용의 급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위기 상황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4. 나가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삶의 국면마다 겪게 되는 생활의 필요를 함께 나누고 헤쳐 나가면서 서로 돌보는 일은 커먼즈가 커먼즈로서 기능하기 위한 기본이다. 반면, 국가나 시장, 가족을 넘어선 공동체로서 커먼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돌봄의 필요란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돌봄이란 그 성격상 선형적으로 정의하기도 어려우며 개인이 처한 삶의 맥락과 특성을 고려해서 관심과 배려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돌봄은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을 통해서도, 관료화된 국가도 제공할 수 없으며, 일부의 통념과는 달리 가족 내에서 제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제주에서 공동자원을 잘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마을공동체

를 만들어나가는 중이라 평가받고 있는 조천읍 선흥리 마을과 표선면 가시리 마을의 경우, 마을의 노인과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마을 활동의 중심 축이자 이후 주요 계획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특히 선흥리의 경우, 마을의 노인들 생신을 모두 마을 달력에 새기고 일단 수년간 이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을 통해서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 세대들이 마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기도 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과연 마을이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왜 필요한지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마을 노인들의 구술을 통해서 과거 수행되었던 공동체적 자연관리에 대한 지식과 마을의 역사를 전수받기도 하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이러한 기록들이 마을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전수하고 전수 받는 그 과정 자체가 노인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돌봄의 한 형태라는 사실 역시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숫자가 계속 줄던 마을의 학교가 되살아났으며 학교를 중심으로 세대의 전승이 이루어지고 공동체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다.⁸⁾

결국 복지 커먼즈는 커먼즈 중에서 특수한 형태가 아니라 커먼즈의 본질적 속성을 체현하고 있되, 돌봄과 사회재생산의 위기에서 다양한 분야의 비판과 저항을 상호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를 포함하여 지속불가능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 한국사회가 단순히 복지서비스의 확충이나 지원책 마련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현재의 사회재생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재생산위기가 이토록 첨예하게 부각되는 것은 신자유주의 이후 자연자원, 토지, 공적 공간과 공공 서비스 등 커먼즈가 지속적으로 사유화되고 상품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 교육,

8) 공동자원을 둘러싼 조천읍 선흥리 마을공동체의 실험과 공동체-커먼즈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영신(2017)을 참조

돌봄노동이 급속하게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상품화되면서 사회재생산의 위기는 심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동시에 커먼즈의 복원과 창조를 위한 투쟁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사회재생산의 위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볼 때 생태환경의 문제와 돌봄의 위기 속에서 발견되는 젠더정의에 대한 요구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복지 커먼즈라는 개념은 커먼즈라는 말이 포괄하고 있으나 종종 주목받지 못하는 돌봄과 복지의 차원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킴으로써 커먼즈론을 확대시켜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계보 속에서 진행되어 온 여러 운동들이 연대의 접점을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개념적 차원의 연대에 기반할 때,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돌봄의 위기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이뤄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공유와 협동, 호혜성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적 실천과 가능성의 공간으로서의 커먼즈를 확대해 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도완. 2016. “공동자원과 생태적 공공성: 공동자원의 섬 제주.” 『환경사회학연구 ECO』 20(2): 401-410.
- 김선필. 2014. “공유지 복원을 위한 이론적 검토- 르베르브의 공간이론을 통한 공유지 비극 모델의 재해석.” 『마르크스주의 연구』 11(3): 172-201.
- _____. 2013.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공동자원 개념의 도입.” 『환경사회학연구 ECO』 17(2): 41-78.
- 김자경. 2017. “커먼즈 개념을 통한 마을의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제주 금암마을의 양돈 악취문제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17: 87-117.
- 라인보우, 피터. 2012. 『마그나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 갈무리.
- 마경희. 2011. “돌봄의 윤리: 돌봄과 정의의 이원론 비판.” 김혜경 편, 『노인돌봄』: 17-48. 양서원.
- 백영경. 2017. “남한의 인구위기론: 재생산의 위기와 공동체의 미래.” 『인구·지식·젠더: 한·중 여성 트랜스내셔널하게 읽기』. 한울.
- 석재은. 2011. “좋은 돌봄의 정책 원리: 돌봄의 상품화를 넘어서.” 김혜경 편, 『노인돌봄』: 49-80. 양서원.
- 송다영. 2014. “돌봄의 사회화와 복지국가의 지연(遲延).” 『한국여성학』 30(4): 119-152.
- 송계숙. 2016. 『복지의 배신』. 도서출판 이후.
- 윤홍식.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종합평가.” 『월간 복지동향』.
- _____. 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 『한국가족복지학』 33: 5-35.
- 이가라시 다카요시. 2017. “현대총유론.” 『동아시아의 커먼즈: 가능성에서 현실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제주대학교 SSK 연구단 주최, 2017년 2월 15-16일, 제주대학교.
- 이가라시 다카요시 외. 2016. 『현대총유론』. 제주대학교 SSK 연구단 공동자원연구총서 003. 진인진.
- 이병천. 2014. “시장 대 공공성 논쟁: 공공성 담론과 한국 진보의 기획, 논의의 성과와 과제.” 『반성된 미래: 무한 경쟁 시대 이후의 한국 사회』. 서울: 후마니타스.
- 정남영. 2015. “커먼즈 패러다임과 로컬리티의 문제.” 『로컬리티 인문학』 14: 89-112.
- 정영신. 2017. “커먼즈와 커뮤니티 관계의 역사적 변동—제주도 선흘리 마을과 선흘곶·동백동

- 산 관계를 사례로.” 『로컬리티 인문학』 17: 119-163.
- _____. 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 399-442.
- 정영신·백영경. 2015. “대만 원주민의 토지반환운동과 공동체-공동자원 관계의 변동.” 『환경사회학연구 ECO』 19(2): 37-81.
- 조대엽·홍성태. 2013.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 공공성 프레임의 역사적 유형.” 『아세아연구』 152: 7-41.
- 조은주. 2012. 『인구, 국가, 개인: 한국 가족계획 사업과 통치의 상상불』.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파레냐스, 라셀 살라자르. 2009.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여이언이론 17)』. 도서출판 여이언. Rhacel Salazar Parreñas, *Servants of Globalizatio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 프레이지, 낸시. 2017. “자본과 돌봄의 모순.” 『창작과 비평』 175호(2017년 봄호). (“Contradictions of Capital and Care.” *New Left Review* 100, July-August 2016.)
- 최현. 2013. “공동자원 개념과 제주의 공동목장: 공동자원으로서의 특징.” 『경제와 사회』 98: 12-39.
- 최현·김선필. 2014. “제주의 바람: 공동자원론적 관리 방식.” 『탐라문화』 46: 97-126.
- 최현·파이싱성. 2015. “공동자원론과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제와 사회』 108: 166-198.
- 최현 외. 2016a. 『공동자원의 섬 제주 1: 땅, 물, 바람』. 진인진.
- _____. 2016b. 『공동자원의 섬 제주 2: 지역 공공성의 새로운 지평』. 진인진.
- 하버, 데이비드. 2014.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에이도스.
- Allan, Thomas. 2016. “Beyond Efficiency: Care and the Commons.” 2016. 10. 6. <http://www.centreforwelfarereform.org/library/by-date/beyond-efficiency.html>
- Bollier, David. 2014. *Think like a commoner: a short introduction to the life of the commons*, 배수현 옮김.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새로운 공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공유인을 위한 안내서』. 서울: 갈무리. 2015.
- Bollier, D. and Silke Helfrich(eds.). 2015. *Patterns of Commoning*. Commons Strategy Group and Off the Common Press.

- _____. (eds.). 2012. *The Wealth of the Commons: A World Beyond Market and State*, Levellers Press.
- Bollier, David and Burns H. Weston. 2013. *Green Governance: Ecological Survival, Human Rights and the Law of the Commo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mpbell, Beatrix. 2013. *End of Equality: The Only Way is Women's Liberation* (Manifestos for the 12th Century), London, UK: Seagull Books.
- Epstein, G., J. M. Vogt, S. K. Mincey, M. Cox, & B. Fischer. 2013. "Missing ecology: integrating ecological perspectives with the social-ecological system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Commons* 7(2): 432-453.
- Federichi, Silvia. 2012. *Revolution at Point Zero*, 황성원 옮김, 『혁명의 영점』, 서울: 갈무리, 2013.
- Fraser, Nancy. 1995. "From Redistribution to Recognition?: Dilemmas of Social Justice in a 'Post-Socialist Society'," *New Left Review*, vol 212.
- Folke, Carl. 2006. "Resilience: The Emergence of a Perspective for Social-Ecological Systems Analyse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6(3): 53-67.
- Folke, Carl, S. Catpenter, B. Walker, M. Scheffer, T. Elmqvist, L. Gunderson, and C. S. Holling. 2005. "Regime shifts, resilience and biodiversity in ecosystem management." *Annual Review of Ecology Evolution and Systematics* 35: 557-581.
-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243-1248.
- Hardt, Michael and Negri, Antonio. 2009. *Commonwealt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einrich Böll Foundation. 2009. "Strengthen the Commons – Now!" <https://www.boell.de/en/democracy/democracy-8099.html>
- Hochschild, A. 2000. 'The Nanny Chain', *American Prospect*. 3 January.
- Honneth, Axel. 1995.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Cambridge, UK: Polity Press.
- Marx, Karl. 1993. *Grundrisse: Foundations of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trans. by Martin Nicolau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Menstrum, Francine. 2015. "Human Rights and the Common Good: why social protection is a social commons?" <http://www.other-news.info/2013/10/human-rights-and-the-common->

- good-why-social-protection-is-a-social-commons/
- Negri, Antonio and Casarino, Cesare. 2007. *In Praise of the Common: a Conversation on Philosophy and Politics*, Minneapolis,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Newman, Janet and Clarke, John, 2014. *States of imagination. Soundings*, 57: 153-169.
- Ostrom, Elinor.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윤홍근·안도경 옮김, 『공유의 비극을 넘어』,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10.
- Ostrom, V. & E. Ostrom. 1977. "A Theory for Institutional Analysis of Common Pool Problem." in Hardin & Baden (eds.). *Managing the Commons*. W. H. Freeman and Company.
- Ostrom, E., T. Dietz, N. Dolsak, P. C. Stern, S. Stonish, and E. U. Weber(eds.). 2002. *The Drama of the Commons*. National Academy Press.
- Poteete, A. R., M. A. Janssen, and E. Ostrom. 2010. *Working Together: CollectiveAction, the Commons, and Multiple Methods in Practi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ohn, Heidi, Stravos Kousoulas and Gerhard Bruyns, 2015. *Introduction: Commoning as Differentiated Publicness*. Footprint 16: 1-8.
- Williams, Fiona. 2014. *Making Connections Across the Transnational Political Economy of Care, in Migration and Care Labour*, Bridget Anderson and Isabel Shutes (eds), Palgrave Macmillan, UK.
- _____. 2015. Towards the Welfare Commons: Contestation, Critique and Criticality in Social Policy, in *Social policy review 27: Analysis and Debate in Social Policy*, Policy Press.



백영경 paix@knou.ac.kr

제주대학교 SSK연구단 일반공동연구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문화인류학, 과학기술학, 여성학 전공. 주요 논저로 “대만 원주민의 토지반환운동과 공동체-공동자원 관계의 변동”(공저),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와 지식의 정치”, “사회과학적 개념과 실천으로서의 ‘위기’”, 『한국사회문제』(공저), 『여성운동 새로 쓰기』(공저), 『프랑켄슈타인의 일상: 생명공학시대의 의료와 일상』(공저) 등이 있다.